

쇠고기 이력제

쇠고기 이력제 현장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교육 전경)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월 1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쇠고기 이력제 현장지원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동 교육은 우리원 조직개편에 따라 이력제 업무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원의 이력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2011년도 쇠고기 이력제 사업계획, 위험요소 지표를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요령, 구제역 백신접종 자료 관리요령, 유통전문가 양성 계획,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통한 DNA시료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기지역

경기도 축산농가, 3월말부터 재입식 허용

경기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축입식 준비가 완료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들에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6일 "3월 20일쯤이면 도내 19개 시·군의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며 "축사에 대한 대대적 청소작업을 실시한 후에 입식 준비가 끝난 농가들부터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구제역 발생이 제로상태로 이어지면서 기존 시흥, 고양, 양평 등 10개 시·군 가축 이동제한 해제에 이어, 나머지 9개 시·군도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본 후 20일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조치 후 해당 농가는 구제역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입식이 가능하며 양성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30일 경과 후 가축방역관의 방역상태 확인 후 재사육이 가능하다. 도는 재입식 추진에 앞서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 동안 도내 산저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경기 축산 클린 대정소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농가들에게 ▲남아있는 건초, 볏짚, 사료, 튜팜은 매몰 또는 소각 ▲축산분뇨는 소독 후 축분처리장으로 배출 ▲매몰지는 매일 소독 ▲모든 축사, 울타리, 부차기구 등은 가성소다수와 수세미 등을 이용해 세척할 것 ▲사료창고, 농기구보관함, 농장 내 사택 등은 포름알데하이드로 훈증 소독할 것 등의 지침을 내려 보냈다.

도는 가축방역관과 민간 건설단체를 활용해 농장의 방역상태를 확인한 후,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재입식 예상 가축 수는 한우가 3만3천두, 젖소 3만1천두, 모돈 15만두 등이다.

대전충남지역

홍성군,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

충남도는 국내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에서 지속적으로 의심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3월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양돈농가 주변과 진입로를 중심으로 15대의 소독방제차량을 투입해 집중소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207개 구제역 비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일제소독이 진행됐다. 또한 홍주미트 도축장에 대해서도 하루 세 차례 내부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송차량과 모는 사람에 대해 소독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발생농가와 비 발생농가별로 수매일자가 구분돼 도축되고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6만3천150두의 돼지에 대해 예방백신 보강접종이 추진됐다. 한편 홍성군에선 지난 2월 1일 대평리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으며 방역대내에서 의심신고가 5~10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충북지역

증평군, 축산농가 4월부터 본격 재입식

충북 증평지역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시름을 떨고 4월부터 가축을 재입식해 재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3월 19일 소 이동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3월 25일 돼지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돼지는 지난 3월 2일 이후, 소는 지난 2월 27일 이후 구제역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임상검사할 거쳐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한 달 뒤부터 가축 재입식이 가능해 축산농가가 4월부터는 가축을 재입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동제한 해제에 이어 인근 지역 구제역 발생 추이를 감안해 13곳의 이동초소를 축소 운영하고 구제역이 완전 소멸될 때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군은 매몰지 17곳에 대해 관리실명제 14명을 지정하고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보건소로 태스코포스(T)팀을 구성해 매몰지를 주기적으로 관찰·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증평군은 소 5천840두의 5.2%, 돼지 2만5천여두의 64%를 매몰했다.

광주전남지역

전남도, '동물복지' 선언

전남도가 '동물 복지' 보장을 선언하고 '가축 운동장 만들기'에 나섰다. '밀집 사육'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살육 위기에 내몰린 가축들을 구하기 위한 대안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6일 "소와 돼지 등의 사육농장에 운동장 설치 등을 지원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을 마련, 전남도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동물 복지' 략 염두에 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송아지는 두당 2.5㎡ 이상, 번식우 5㎡ 이상, 젖소 송아지 4.3㎡ 이상, 성우 8.4㎡ 이상의 운동장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돼지는 임신돈 1.4㎡ 이상, 바육돈 0.9㎡ 이상, 닭은 1.1㎡ 이상, 오리 0.11㎡ 이상이다. 운동장에는 그늘막,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을 만들고 주변에는 변백 등 수풀과 초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축산농가에 각종 자재와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참여 농가는 생산된 축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우선 출하하게 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전남도는 3만7천여 농가에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

청송군, '생태축산군'으로 거듭나

경북 청송군이 전국을 휩쓴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던 '생태축산', '유기축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지난 3월 1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처럼 구제역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된 건 지역 가축들의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축산현장은 가축들이 비좁은 축사에 갇혀 항생제와 호르몬제로 길러지다 보니 도축장으로 옮겨지는 날 처음 바깥공기를 마실 정도로 '몽장식' 밀식사육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밀식사육 논란을 불러온 가축두수당 면적기준을 지금보다 50% 정도 늘리고 유기 축산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방침이다. 생태축산의 성공여부는 일반축산보다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축산물이 비싼 값에도 잘 팔리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생태 축산물에 대한 경쟁이 아직 농산물처럼 치열하지 않은 만큼 관련 브랜드를 선점해 비용문제도 고민하는 축산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제주, 축산 약취·분진 차단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 약취와 분진을 막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저감기술 연구사업을 올해 3월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6일 밝혔다. 이 연구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올해 15개 어젠다 농업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공모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하고 3억원(연도별 1억원, 국비 100%)을 투자해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이 연구사업은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주관, 제주테크노파크와 합동으로 추진, 도에서는 축산농가 약취제어시설 운영 현황 등의 자료 수집 지원과 현장 저감효능 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협의, 약취민원 다발지역 축산사업장을 위주로 한 대상지 선정은 마무리하고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사업 결과는 실용화 적용 가능성 검토를 통해 축산농가에 보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